

2024.11.26.(화)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Tel 02-6788-3201·3631 / Fax 02-6788-3635
김현국 국장 010-2581-2487 / 김대경 보좌관(민병덕 의원실) 02-784-9540

<을지로위원회, 을(乙)을 위한 민생예산 통과촉구 긴급기자회견>

- 민생 역주행 3년, 윤석열 정부의 민생파탄에서 국민을 지켜내겠습니다.
- 을(乙)을 위한 민생예산 5조 5,712억 원 및 민생회복지원금 반영 촉구

2024년 11월 25일 (화) 09:0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기국회에서 을을 위한 민생예산 통과를 위해 정부여당의 동참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5년 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규모를 전년 대비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예산안을 두고 건전재정과 재정 효율성을 내세우며, 마치 국가 경제의 균형을 잡은 성과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예산안이 약자와 서민의 삶을 어떻게 외면하고 있는지, 민생의 절박함을 어떻게 방치하고 있는지 선명히 드러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3.2% 증액이라는 표면적인 숫자는 증가를 나타내는 듯 보이지만, 물가 상승과 서민 경제의 현실을 고려하면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자영업 부채가 1,000조를 넘어서고 티메프 사태로 인해 수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의 약탈적인 수익 추구행위로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점점 냉혹해 가고 있고, 비정규직 확대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점점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예산,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공공임대주택 예산까지 삭감하여 국민생존의 근간이 흔들리게 했습니다.

국가의 재정은 경제 순환을 유도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면 청년층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이는 소비와 경제 활력을 촉진하며, 소상공인의 상권을 활성화하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그 효과가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공공임대주택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경제 참여를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민생예산의 본질이자, 경제발전의 출발점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서민 경제를 지원하는 것보다 중요한 국가 예산은 없습니다. 효율성과 재정 건정성이 민생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뭄에 물이 귀하다고 아끼기만 해서야 농사가 되겠습니까?

마른 땅에 물 한 방울 없이 풍년을 기원하지 못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 효율성을 명분으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약자와 서민을 희생시키는 선택을 바뀌어야 합니다. 당장의 통계 수치가 굶주림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정부여당이 민생예산을 대폭 강화하고, 약자와 서민을 위한 보호망을 촘촘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과, 사회취약계층 지원정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정책, 노동자의 권리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은 국회도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삶을 돌보는 민생예산으로 챙겨야 할 것입니다.

서민의 삶이 안정되어야 국가가 균형을 찾습니다. 677조 원의 예산 속에서 민생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부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주길 바랍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민생 예산 5조 5,712억 원과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증액**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을 과감히 늘려야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미래를 준비하는 학술기반 연구 등의 예산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야말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선 청년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 없이 저절로 이뤄지진 않습니다. 월 20만 원의 월세 지원이 급등하는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에게 기존의 일자리에만 만족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술 혁신 분야와 지역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연구지원과, 다양한 학술기반 연구예산 증대로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회취약계층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창업 지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을들의 예산’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긴급복지, 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 사업은 ‘을’의 삶을 존중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온열질환자 지원은 기후위기와 의료 접근성의 격차 속에서 약자들에게 생존을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보건복지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정규직화는 ‘을’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며, 정신건강, 아동 학대 예방, 노인 보호와 같은 필수 사회서비스의 토대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구축의 한 부분을 책임져 온 사회적경제 지원

예산을 복원해야 합니다. 정부는 2023년 1,000억 원에 달했던 사회적경제 지원예산을 2년 만에 1/3 토막냈습니다. 사회적경제 현장 활동가들은 갑작스러운 정부의 예산 지원 중단을 사회적경제 죽이기로 받아들이고 있고, 실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 사다리는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대로 사회적경제 현장의 마중물이 마르면 역대 정부의 지원 아래 어렵게 싹틔운 귀중한 민생경제 자산들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올들의 예산'은 단순히 약자를 돕는 배려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예산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관련 예산의 증액과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예산은 약자를 위한 예산이자,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예산입니다.

셋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가 절실합니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재개 ▲상권 활성화 사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예산은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초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히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지역 상권과 시장에서 소비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로 이어지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경제 정책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위축된 경제를 회복시키는 강력한 재정 정책이며,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성장이 닫힌 경제구조의 마중물 정책입니다.

자영업부채가 1,000조를 넘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장사를 해서 빚을 갚도록 해야합니다. 폐업의 위기가 속출하는 지금의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주민 할인혜택으로 가게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상점의 매출증대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순환구조를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채무상환의 고통이 가시기 전에 티메프 사태가 터졌습니다. 불황을 이유로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의 약탈적인 불공정 행위가 빈번합니다. 일반 매장은 온라인 입점업체와 경쟁에서 패하여 폐업합니다. 언제까지 울과 울끼리의 생존경쟁을 지켜보려고 합니까? 명심해 주십시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넷째, 노동자의 권리와 처우 개선입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정규직화 지원 ▲공공기관 인건비 증액을 통해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앞에서는 노동약자 지원과 노동개혁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노동자 지원을 축소하는 국민 기만도 멈춰야 합니다. '1조 7,845억, 역대 최대'였던 작년 임금체불은 올해 또다시 기록 경신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대규모 체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정부는 체불청산 법률구제인력을 구조조정하는 등, 피해구제에 뒷전입니다. 산재 인정까지 걸리는 기간도 윤석열 정부에서 600일을 돌파했고,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은 요원합니

다.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은 편성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노동자 부당해고사건이 역대 최대인 1만 5천 건을 돌파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국선대리인 예산까지 삭감하는 등, 노동약자를 지원하는 것인지 외면하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지경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중장기 방향이나 대책도 없이 학교예술강사 예산에 대해 ‘묻지마 지방교육재정 이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술강사지원 사업에서의 국고 삭감은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들이 문화예술교육현장을 이탈하게 만들어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학교예술강사들의 생계를 지키고,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23년도 수준의 국고 증액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농식품부의 가축위생방역본부 방역직 등 노동자들이 혹독한 처우여건에서 방역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축방역 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가축방역의 고도화와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의 최일선에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처우는 열악하기 그지없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 노동자 처우 개선도 시급합니다. 성폭력·가정폭력,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 약자들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정책수행기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위험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다섯째,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약자를 위한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 해야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안 시행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하며 ▲ 노후 공공임대 개선사업을 확대해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한 서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주거정책에서도 약자 외면 정권, 거짓말 정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역대 최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한 정부가 예산은 대폭 줄였습니다. 올해도 지키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약속을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사다리가 돼야 할 주택도시기금을 아껴 부자감세 뒤처리, 세수결손 메꾸기에 쓰는 파렴치한 행태를 멈춰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증액해 전세사기, 갭통전세에 위협받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전세사기 피해지원안의 시행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 노후 공공임대 개선사업을 확대해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한 서민들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하겠습니다.

약자와 서민에게 외면당한 정부로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민생을 지키는 예산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2024. 11. 26.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참고자료] 2024년 민생예산 증액요청 세부내용

1. 미래세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소상공인 창업지원하는 혁신공간 조성 (정부예산안 대비 45억 증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서비스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10억 증액)

[국토교통부]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장비비 지원사업 (정부예산안 대비 50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친환경 유무인 해양 모빌리티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20억 증액)

[고용노동부] 연구기관 및 케어센터 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10.67억 증액)

[행정안전부] 국립 소방병원 건립 (정부예산안 대비 89억 증액)

[농림축산식품부] 어선청년임대- 어선임대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13.5억 증액)

[농림축산식품부]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청년 가구의 농식품 바우처 지원 (237억 증액)

2. 사회취약계층지원

[국회운영위원회] 국회공무직근로자 처우개선 (정부예산안 대비 20.8억 증액)

[농림축산식품부]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을 위해 대상자 확대 (정부예산안 대비 1,757억 증액)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형보건의료지원, 농촌의료돌봄지원 시범사업 (정부예산안 대비 14억 증액)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정부예산안 대비 121억 증액)

[농림축산식품부] 중대재해 대응 지원(전국) (정부예산안 대비 44.8억 증액)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등 농업인 온열질환 등 재해예방 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17억 증액)

[농림축산식품부] 농작업안전관리자 활용 농작업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농업인 온열질환 등 재해예방 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11.7억 증액)

[보건복지부] 사회취약계층지원-긴급복지 (정부예산안 대비 498.91억 증액)

[보건복지부] 사회취약계층지원-장애인활동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1848.62억 증액)

[보건복지부] 사회취약계층지원-장애아동가족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25.7억 증액)

[보건복지부] 사회취약계층지원-장애인일자리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72.97억 증액)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도 이용 가능과 대상 확대 등 (정부예산안 대비 584.93억 증액)

[보건복지부]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활동지원급여 단가 인상 (정부예산안 대비 47.43억 증액)

[보건복지부] 사회취약계층지원-장애인활동지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 정부예산안 대비 13.6억 증액)

[보건복지부] 사회취약계층지원-발달장애인지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25억 증액)

[보건복지부] 사회취약계층지원-발달장애인지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활동지원급여 단가 인상분을 반영 (정부예산안 대비 31.26억 증액)

[보건복지부] 사회취약계층지원-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정부예산안 대비 45.48억 증액)

[보건복지부] 사회취약계층지원-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운영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109.06억 증액)

[보건복지부] 사회취약계층지원-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정부예산안 대비 0.1809억 증액)

[보건복지부] 사회취약계층지원-기후위기 대비 온열질환자 (정부예산안 대비 0.08억 증액)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전출(출산크레딧,군복무크레딧) (정부예산안 대비 8,377억 증액)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2,048억 증액)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47.3억 증액)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교육홍보 (정부예산안 대비 26억 증액)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26.7억 증액)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의료비등 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4.8억 증액)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상담소 (정부예산안 대비 7.6억 증액)
 [여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정부예산안 대비 8.9억 증액)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4.7억 증액)
 [정무위] 사회취약계층지원-서민금융진흥원 출연 /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전년 동일 수준, 정부예산안 대비 370억 증액)
 [금융위원회] 사회취약계층지원-서민금융진흥원 출연 / 햇살론15 (정부예산안 대비 550억 증액)
 [금융위원회] 사회취약계층지원-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6.84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육성 - 장애인기업 성장기반 구축 (정부예산안 대비 23.25억 증액)
 [국가보훈부] 6.25 자녀수당 (정부예산안 대비 전년대비 14.7억 증액)
 [국가보훈부] 교통시설 이용 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5억 증액)
 [국가보훈부] 보훈병원 진료 (전년대비 653억 증액)
 [국가보훈부] 재대군인 의료지원 (전년대비 17억 증액)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교육비 지원(정부예산안 대비 2.5억 증액)

3. 소상공인 지원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2조 900억 증액)
 [금융위원회] 정산지연 피해기업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114억 증액)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 재원 마련 (정부예산안 대비 2,200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설 (정부예산안 대비 3,200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정부예산안 대비 200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 확대 구축운영을 위한 소상공인 유통물류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20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글로벌 상권 조성 (정부예산안 대비 30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상품권의 정확한 데이터 및 실태조사 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5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 경영혁신지원 - 백년소상공인 육성 (정부예산안 대비 10.7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스마트화지원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115.4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스마트 플래그십스토어 전국 확대 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60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 내역사업 신설 (정부예산안 대비 29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인프라 - 소상공인연합회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10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 손실보전금 완충자본 필요 (정부예산안 대비 2,200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 창업 초기 펀드 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800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신성장기반자금(융자) - 스케일업 금융 (정부예산안 대비 600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정부예산안 대비 36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AI 스타트업 육성 (정부예산안 대비 41.3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파크 신규 조성 (정부예산안 대비 16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재기지원 -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정부예산안 대비 41.22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도약 및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를 위한 창업패키지 사업 (정부예산안 대비 253.7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홈쇼핑T커머스에 대한 중소기업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12.6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 디지털멘토 플랫폼 구축 및 확산 (정부예산안 대비 30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디딤돌’ 사업 (정부예산안 대비 410.87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328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법률 자문 등 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11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산학 네트워크 사업 (정부예산안 대비 50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스마트서비스지원 (부예산안 대비 76.5억 증액)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60.63억 증액)

[고용노동부] 협동조합활성화 사업-진흥원 출연금 (전년 동일 수준, 정부예산안 대비 49.45억 증액)

4.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본부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방역본부 운영지원, 방역본부 자산취득, 방역직 인건비,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13.2억 증액)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정책 추진을 위해 방역본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1.4억 증액)

[문화체육관광부] 학교예술강사 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494억 증액)

[교육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206억 증액)

[문화체육관광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105억 증액)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및 처우개선 (정부예산안 대비 23.45억 증액)

[보건복지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지원-정신건강 증진시설 운영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51.16억 증액)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정부예산안 대비 11.13억 증액)

[보건복지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지원-다함께돌봄센터 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57.71억 증액)

[보건복지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지원-노인보호 전문기관 (정부예산안 대비 3.95억 증액)

[보건복지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지원-요보호이동 그룹홈 운영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36.35억 증액)

[보건복지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지원-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221.73억 증액)

[보건복지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지원-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0.357억 증액)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인력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45.99억 증액)

[고용노동부] 근로조건개선지원-권리구제지원팀 운영 (정부예산안 대비 57.58억 증액)

[고용노동부] 노동약자지원-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7.5억 증액)

[여성가족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 인건비 처우개선 (정부예산안 대비 0.6억 증액)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가 업무과정에서 받는 정신건강 피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1.5억 증액)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내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인건비를 센터 기본인력수준으로 상향 (정부예산안 대비 0.5억 증액)

[여성가족부] 정서·행동 문제 청소년 대상 거주형 치료재활전문기관으로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위험수당 신설 (정부예산안 대비 1.7억 증액)

[고용노동부] 저임금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 시 국선대리인 무료선임 사업 (전년 동일 수준, 정부예산안 대비 1.74억 증액)

5. 전세사기 피해지원 등 주거약자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매입임대 경상보조 (300억 신규 증액)

[국토교통부]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시설개선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700억 신규 증액)

[국토교통부] 청년·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2,500억 신규 증액)

[국토교통부] 청년·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1,000억 신규 증액)